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완전 철회 건의(안)

의안 번호	395
----------	-----

발의년월일 : 1999년 7월 10일

발 의 자 : 서동에 의원외 4인

1. 주 문

교육 환경 개선 일환으로 추진되다 유보된 100인 이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철회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함.

2. 재안이유

- 학생수 100인 이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유보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하여 일단은 쌍수를 들어 환영함.
- 학생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학교가 있도록하는 것이 국가와 교육부의 올바른 교육의 자세요, 도리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 교육은 당장의 눈앞에 성과보다는 백년 대계를 내다보며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 방향임에도 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운운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에게 마치 나무를 가꾸기 전에 순을 자르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함.
- 통·폐합됨으로써의 폐단은 우리 자녀들에게 학부모와 교사의 보호를 멀리해 결국은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며, 원거리 통학의 불편과 학부모와의 대화 부족으로 건강한 가정 문화가 위협 받을수 있음.
- 이와 같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교육부의 시행중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완전히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함.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완전 철회 건의문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다가 대다수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유보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비교육적인 발상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가 있는 곳에 학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학교가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도리인 것입니다.

학교는 회사나 공장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소득 500달러의 군사정권 때도 낙도 분교의 어린이 교육은 활발히 진행됐고, 일제 침략하에서도 벽지 교육은 있었으며, 춘궁기가 연례 행사였던 독재정권 때도 낙도 교육은 건재 하였으며, 그런 곳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졌었는데, 경영을 잘못된 부실 은행에는 몇 조원을 쏟아부으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한 2세 교육에는 경영의 논리를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의 정책을 누가 바르다고 믿겠습니까?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하는 어린이는 도시의 어린이들보다 질이 낮은 교육적 환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혜택권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더 큰 배려를 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현실을 인식 체감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100명이 넘지 않는 학교는 효율성이 떨어져 큰 학교에 통·폐합하는 것이 경영상·교육상 옳다는 판단으로 추진하다가 유보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철회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건의합니다.

1999년 7월 22일

경기도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